

제2차 한국전쟁이 임박했는가?

황지환 (서울시립대)

I. 북한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최근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논의가 뜨겁다. 한반도 전쟁 임박설은 1990년대 이후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해 왔던 지그프리트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와 로버트 칼린(Robert L. Carlin) 미들베리연구소 연구원이 쏘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북한 전문매체인 38North에 기고한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에서 “김정은이 1950년의 김일성처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like his grandfather in 1950, Kim Jong 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고 주장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의 미국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L. Gallucci) 대사 역시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nuclear war could break out in Northeast Asia in 2024)”고 경고했다. 한반도 전쟁 임박론의 근거는 북한이 최근 제시한 남북한 두개 적대적 교전국가와 영토완정, 북러 군사협력,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청할만한 주장이지만, 제2의 한국전쟁 임박설을 논의할 명확한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전쟁 임박설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북한이었다. 김정은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한 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24/1/16). 국내외에서는 이를 전쟁 가

능성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북한 영토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향후 북한 헌법 개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하여 전쟁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의 연설은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한국에 대한 개전을 둘러싸고 북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되었다.

II. 핵무력정책법과 북한의 공세적 대외전략

전쟁임박설이 제기될 정도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더 위험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이 더 공세적으로 변한 점은 분명하다. 김정은의 공세적 언사만큼이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보여준 제도와 행동의 변화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입법화하여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한 새로운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발표했다. ‘핵무력정책법’은 위기시 핵 선제사용(nuclear first-use)을 상정하며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전쟁임박 시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상황 세 가지, 전시 핵사용,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위기상황을 핵 사용조건으로 규정했다. ‘핵무력정책법’은 북한의 핵교리가 이제 핵 선제사용을 상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2017년 말 대미 핵억제력을 위한 전략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포함한 공세적 핵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지역 차원 핵보유국들의 핵전략을 연구해 온 비핀 나랑(Vipin Narang 2014)의 분류법에 따르면, 북한이 이전까지 보여 준 핵교리는 기존 미소 냉전기의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에 기반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적대국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을 위해 핵을 대량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공격을 억제하고자 한다. ‘확증보복’ 전략은 적대국의 공격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 선제타격을 상정하지만, 전략의 핵심은 억제에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능력 증대를 통해 대미 핵억제를 추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핵무기로 보복하는 처벌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를 상정해 왔다. 하지만, ‘핵무력정책법’에서 제시한 핵교리는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에 가깝다. 이는 비핵,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상대국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에서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칭확전’ 전략 역시 억제 전략이지만, 핵 선제사용을 상정하여 훨씬 더 공세적이고 위험한 전략이다.

더구나 ‘핵무력정책법’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규정하여 핵사용의 사전위임(predeleg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핵무력정책법’은 북한의 대외전략이 이전보다 더 공세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실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23년 7월 담화문에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력정책법’의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23/7/20). 강 국방상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상정하여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핵무력정책법의 핵교리 변화와 공세적인 레토릭이 전쟁 불사를 외쳤음에도 이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III. 여전히 핵억제

김정은의 언급과 ‘핵무력정책법’의 공세적인 핵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북한이 핵선제 사용과 사전위임을 언급한 핵교리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핵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에서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핵억제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여 전쟁 억제가 1차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비대칭 확전’ 전략의 핵교리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 목적은 억제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정은이 핵무력의 ‘둘째 사명’을 제기하면서도 기본 사명은 전쟁억제에 있음을 언급한 2022년 4월 연설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김정은은 올해 1월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북한의 의도는 1950년 6월처럼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 보다는 위기 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전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김정은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1950년의 한국전쟁처럼 의도되고 계획된 전쟁 보다는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III. 우리는 어떤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가?

북한의 군사전략이 여전히 억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정은의 공세적 언급과 핵교리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위기 고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사라예보 사건처럼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위기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은 한미동맹에 대한 경계태세를 높일 것이고 변화된 핵교리는 우발적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23년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은 북한의 의도된 도발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갈루치 대사가 제시했던 동북아 핵전쟁 가능성은 우발적 충돌에 의한 위기 확산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이었다. 그는 대북 억제력 실패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핵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미 핵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물론 우발적 상황이 반드시 전면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고조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위기확산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국력이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취약함을 고려할 때 스스로 제한적인 도발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우발적 상황이 촉발되어 사라예보 사건처럼 위기를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악몽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추진하거나, 최소한 북한의 핵능력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이후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는 대북정책을 제시한 후 북핵 문제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내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인식하면서 한반도에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을 비핵화 시키

거나 핵능력을 통제하지 않는 한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가능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글로벌 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공세적인 정책을 보일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 같은 우발적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Carlin, Robert J. and Siegfried S. Hecker. 2024.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North*. 1월 11일.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조선중앙통신〉. 2023. "강순남국방상 미핵잠수함 기함은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 7월 20일. <http://www.kcna.co.jp/calendar/2023/07/07-20/2023-0720-013.html>.

_____. 202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김정은총비서 시정연설." 1월 16일. <http://www.kcna.co.jp/calendar/2024/01/01-16/2024-0116-001.html>.

Narang, Vipin.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저자: 황지환_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29일
“제2차 한국전쟁이 임박했는가?”
979-11-6617-761-3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